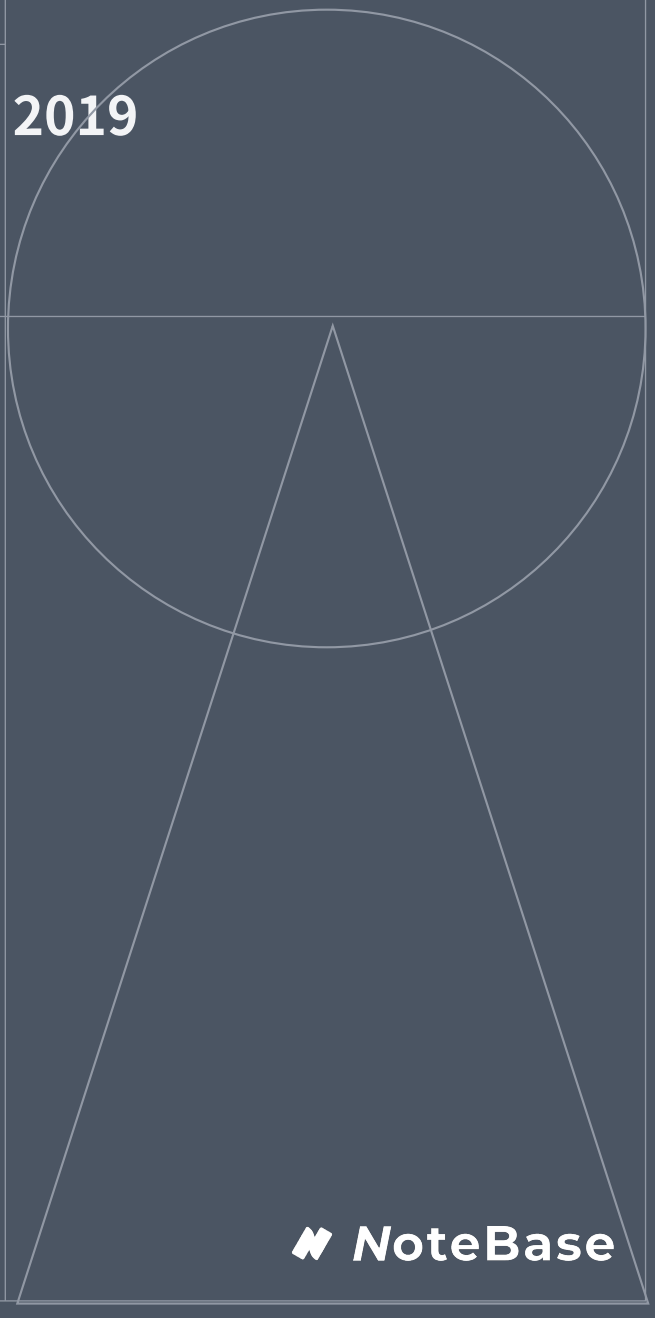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19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19

**공무원/국회직/9급 · 사회 · 2019**

1.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의 제·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수정을 거쳐 재의할 수 있다.
   ②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 제안을 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동일 법안에 대해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④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형식, 자구를 심사한다.
   ⑤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를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답 2번**

### 쟁점

이 문제는 법률안의 제출·재의 요구 절차와 헌법 개정의 발의·국민투표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발의 주체, 재의 방식,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시점, 국민투표 의결 정족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 용어 풀이

재의 요구 =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심의·의결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체계·자구 심사 =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지와 문장·용어가 적절한지를 살피는 심사이다.

### 핵심 구분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128조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고,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국회로 법률안을 돌려보내 다시 의결하게 하는 절차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국회가 헌법상 정족수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안은 확정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소관 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가 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정된 내용이라면 재의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안으로 다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틀린 표현: 수정을 거쳐 재의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국회가 전과 같은 내용으로 재의한다.

② O
- 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X
-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한 번 이루어진다. 국회가 헌법상 정족수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므로 대통령이 같은 법률안에 다시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틀린 표현: 동일 법안에 대해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 올바른 표현: 대통령은 동일한 법률안에 대하여 한 차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X
-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소관 위원회 심사가 끝난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 틀린 표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와 형식, 자구를 심사한다.
- 올바른 표현: 법제사법위원회는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부의 전에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

⑤ X
- 헌법 제130조 제2항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정한다.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틀린 표현: 투표자의 $\frac{2}{3}$ 이상의 찬성.
- 올바른 표현: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오답 포인트**

②의 헌법 개정 발의 요건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를 국민투표 요건과 혼동하기 쉽다. 또한 ④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내용은 맞지만 시점을 ‘본회의 통과 후’로 바꾼 함정이고, ⑤는 국민투표의 찬성 정족수를 ‘투표자 과반수’가 아닌 ‘투표자 3분의 2’로 바꾼 함정이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률안은 제출 주체와 재의 요구의 효과를 확인하고, 헌법 개정은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의 각 단계별 주체와 정족수를 따로 대조한다. 절차의 내용이 맞더라도 '본회의 전·후' 같은 시점 표현이 바뀌었는지도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개헌은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 재적 3분의 2 국회 의결 →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본회의 전에 이루어진다.

NoteBase

2. 다음 표의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 구분 | A | B |
|---|---|---|
| 다품종 소량 생산이 중시되는가? | 예 | 아니오 |
| (가) | 예 | 아니오 |
|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가? | (나) | (다) |

① (가)에는 '쌍방향 매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② (나)에는 '아니오', (다)에는 '예'가 들어간다.
③ A는 B보다 업무 방식의 표준화 정도가 높다.
④ B는 A보다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높다.
⑤ B는 A에 비해 전체 산업에서 지식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다품종 소량 생산과 가정·일터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바탕으로 정보 사회와 산업 사회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A는 지식과 정보가 핵심 자원이 되고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유연한 생산과 생활이 중심이 되는 정보 사회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 쌍방향 매체, 재택근무, 사회의 다원화, 지식 산업의 확대가 대표적 특징이다.
B는 기계와 공장을 바탕으로 규격화된 상품을 대량 생산하는 산업 사회이다. 소품종 대량 생산, 일방향 대중 매체, 가정과 일터의 분리,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 선지별 해설

① O — 정보 사회인 A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 매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산업 사회인 B에서는 일방향 대중 매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② X — 틀린 부분은 (나)에 '아니요', (다)에 '예'가 들어간다는 표현이다. 재택근무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 A에는 '예',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는 경향이 강한 B에는 '아니요'가 들어간다.
③ X — 틀린 부분은 A의 업무 방식 표준화 정도가 B보다 높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대량 생산과 분업을 중시하는 산업 사회 B의 업무 방식이 정보 사회 A보다 더 표준화되어 있다.
④ X — 틀린 부분은 B의 사회 다원화 정도가 A보다 높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다양한 가치와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 정보 사회 A의 다원화 정도가 산업 사회 B보다 높다.
⑤ X — 틀린 부분은 B에서 지식 산업의 비중이 A보다 크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지식과 정보가 핵심 생산 요소가 되는 정보 사회 A에서 지식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표의 첫 행만으로 A와 B를 반대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 사회의 유연 생산 방식이고, 산업 사회의 대표적 생산 방식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A와 B를 올바르게 정한 뒤 나머지 특징을 연결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다품종 소량·쌍방향·재택근무·다원화·지식 산업’은 정보 사회로, ‘소품종 대량·일방향 매체·가정과 일터의 분리·표준화’는 산업 사회로 분류한다.

### 암기 포인트

정보 사회는 다양성과 연결, 산업 사회는 대량 생산과 표준화이다.

NoteBase

3. 다음 표는 외부 효과를 생산과 소비 활동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구분 | 생산 활동 | 소비 활동 |
|---|---|---|
| 외부 경제 | (가) | (나) |
| 외부 불경제 | (다) | (라) |

<보 기>

ㄱ. (가)의 예로 독감 예방 접종을 들 수 있다.
ㄴ. (나)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ㄷ. (다)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ㄹ. (라)에서 소비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외부 불경제와 생산·소비 활동으로 구분하고, 사적 편익·비용과 사회적 편익·비용의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외부 경제는 한 경제 주체의 활동이 대가 없이 제3자에게 편익을 주는 현상이고, 외부 불경제는 제3자에게 비용을 주는 현상이다.
(가)는 생산의 외부 경제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나)는 소비의 외부 경제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며, 시장 소비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다.
(다)는 생산의 외부 불경제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며,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라)는 소비의 외부 불경제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으며, 시장 소비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고 ㄴ은 옳다. 독감 예방 접종은 소비자가 접종하면서 타인의 감염 위험도 낮추는 소비의 외부 경제이므로 (가)가 아니라 (나)의 예이다. 또한 옳은 ㄹ이 빠져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② X — ㄱ과 ㄷ이 모두 틀리다. 독감 예방 접종은 (나)의 예이고, (다)는 사적 비용을 줄이는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 부과 등으로 외부 비용을 사적 비용에 반영해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③ X —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ㄹ이 빠져 있다. 생산의 외부 불경제를 개선하려면 보조금으로 사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금 부과 등으로 사적 비용을 높여 과잉 생산을 줄여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④ O — ㄴ과 ㄹ은 모두 옳다. (나)에서는 제3자에게 생기는 외부 편익 때문에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고, (라)에서는 외부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시장 소비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다.
⑤ X — ㄷ은 틀리고 ㄹ은 옳으며, 옳은 ㄴ이 빠져 있다. (다)의 개선책은 사적 비용을 낮추는 보조금이 아니라 외부 비용을 내부화하는 세금 부과 등이다. 올바른 조합은 ㄴ, ㄹ이다.

### 오답 포인트

독감 예방 접종을 생산 활동으로 오인하거나, 외부 불경제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예방 접종은 소비의 외부 경제이고, 외부 불경제는 시장의 과잉 생산·소비를 줄이도록 세금 부과 등으로 외부 비용을 내부화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행위의 주체가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구분한 뒤, 제3자에게 편익을 주면 외부 경제, 비용을 주면 외부 불경제로 판단한다. 외부 경제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거나 사회적 비용이 더 작고, 외부 불경제에서는 사회적 편익이 더 작거나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 암기 포인트

외부 경제는 시장에서 과소 생산·소비되어 보조가 필요하고, 외부 불경제는 시장에서 과다 생산·소비되어 과세 등 억제가 필요하다. 예방 접종은 소비의 외부 경제이다.

NoteBase

**4.** 다음 표는 사회화 기관 A~D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 |
|---|---|---|
| 목적에 따른 분류 | A |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 | B | (가) |
| 접촉 방식에 따른 분류 | C | (나) |
| | D | 주로 초기 사회화를 담당 |

① A는 일상생활에서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한다.
② B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고, 그 예로 회사를 들 수 있다.
③ C는 D와 달리 비형식적,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기관이다.
④ (가)는 '사회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들어갈 수 있다.
⑤ (나)는 '1차적 사회화의 결과를 강화시켜 전문적인 내용을 교육'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사회화 기관을 설립 목적에 따라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으로, 접촉 방식과 사회화의 성격에 따라 1차적·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도적·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B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활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D는 가족이나 또래 집단처럼 친밀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바탕으로 주로 초기의 기본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C는 학교나 직장처럼 비교적 형식적 관계 속에서 1차적 사회화의 결과를 강화하고 전문적인 지식·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A는 일상생활에서 부수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도적·체계적으로 사회화를 수행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틀린 표현인 '부수적으로'는 '의도적·체계적으로'로 고쳐야 한다.
② X — 회사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B의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주로 전문적 역할과 직업 규범을 학습시키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은 '2차적 사회화 기관'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C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므로 일반적으로 형식적·인위적으로 형성된다. 비형식적·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성격은 오히려 가족이나 또래 집단과 같은 D에 가깝다. 따라서 'C는 비형식적·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는 'C는 형식적·인위적으로 형성된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가)에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기관'이 들어간다. 이러한 B는 사회화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므로, '사회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사회화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고쳐야 한다.
⑤ O — (나)의 C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은 1차적 사회화의 결과를 강화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기능·규범을 교육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오답 포인트

회사는 설립 목적상 B인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사회화의 단계와 성격상 C인 2차적 사회화 기관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분류 기준을 섞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면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판단하면 ②에서 틀리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분류 기준을 나눈다.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면 공식적 사회화 기관,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사회화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면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초기의 기본 사회화를 담당하면 1차적 사회화 기관, 형식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시키면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 암기 포인트

목적 기준은 공식적·비공식적, 접촉과 사회화 성격 기준은 1차적·2차적이다. 회사는 비공식적이면서 2차적일 수 있다.

NoteBase

5. 뮤지컬극장에서 입장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입장료를 10% 인하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결정의 근거로 옳은 것은?

① 뮤지컬극장의 수요가 입장료에 대해 탄력적이다.
② 뮤지컬극장의 수요가 입장료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③ 뮤지컬극장의 공급이 입장료에 대해 탄력적이다.
④ 뮤지컬극장의 공급이 입장료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⑤ 뮤지컬극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가격을 내렸을 때 총수입이 증가하기 위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조건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 조건 정리

주어진 조건: 입장료를 10% 인하하여 입장료 수입을 늘리려 한다.
구해야 할 것: 이 결정이 타당하기 위한 수요의 가격 반응이다.
주의할 조건: 총수입은 가격만이 아니라 판매량인 수요량과 함께 결정된다.

### 사용할 공식

총수입은 $TR = P \times Q$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E_d = \left|\frac{\%\Delta Q_d}{\%\Delta P}\right|$로 나타낸다.
가격을 내릴 때 총수입이 증가하려면 가격 하락으로 줄어드는 수입보다 수요량 증가로 늘어나는 수입이 더 커야 하므로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어야 한다.

### 계산 과정

1. 입장료가 내려가면 관람 수요량은 증가한다.
2.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량의 증가율이 가격의 하락률보다 크게 나타난다.
3. 따라서 수요량 증가 효과가 가격 인하 효과를 능가하여 총수입이 증가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수요가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면 입장료 인하에 따른 수요량 증가 효과가 커서 총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② X — '비탄력적'이 틀린 표현이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인하 시 총수입이 감소하므로, 올바른 문장은 '뮤지컬극장의 수요가 입장료에 대해 탄력적이다'이다.
③ X — '공급이 탄력적'이 틀린 판단 기준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인하에 따른 총수입 증가의 근거가 아니며, 올바르게는 수요가 입장료에 대해 탄력적이어야 한다.
④ X — '공급이 비탄력적'이 틀린 판단 기준이다. 올바르게는 공급의 탄력성과 관계없이 수요가 입장료에 대해 탄력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⑤ X —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초과수요를 뜻할 뿐 가격 인하로 총수입이 증가하는 근거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가격 인하에 대한 수요량의 증가 반응이 충분히 큰 상태, 즉 수요가 탄력적인 상태여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③·④의 공급 탄력성이나 ⑤의 초과수요와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시장의 부족 여부가 아니라 가격 변화가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묻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과 총수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요는 탄력적이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탄력적 수요: 가격 인하 → 총수입 증가, 비탄력적 수요: 가격 인하 → 총수입 감소이다.

NoteBase

**6. 다음 <보기>의 (가), (나)가 해당하는 정치 과정 단계로 옳은 것은?**

<보 기>

(가) 학부모 단체와 학원 단체는 교육청 앞에서 각각 집회를 가졌다. 학부모 단체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기 위해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학원 단체는 영업의 자유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A 정당은 학부모 단체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여, B 정당은 학원 단체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여 선거에 제시할 공약을 마련하였다.

**<정치 과정>**

| ㄱ | ⇨ | ㄴ | ⇨ | ㄷ | ⇨ | ㄹ | ⇨ | |
|---|---|---|---|---|---|---|---|---|
| 이익 표출 | | 이익 집약과 조정 | | 정책 결정 | | 정책 집행 | | 정책 평가 및 환류 |

| | (가) | (나) |
|---|---|---|
| ① | ㄱ | ㄴ |
| ② | ㄱ | ㄷ |
| ③ | ㄴ | ㄱ |
| ④ | ㄴ | ㄹ |
| ⑤ | ㄷ | ㄹ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치 과정의 흐름 속에서 이익 표출과 이익 집약·조정을 구분하고, 제시된 활동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1. 이익 표출(ㄱ) — 개인이나 이익집단이 자신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밖으로 드러내는 단계이다.
2. 이익 집약과 조정(ㄴ) — 정당 등이 여러 집단의 요구를 모아 조정하고 정책 대안이나 공약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3. 정책 결정(ㄷ) — 공적 의사 결정 기관이 정책을 선택하고 확정하는 단계이다.
4. 정책 집행(ㄹ) — 결정된 정책을 행정 기관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단계이다.
5. 정책 평가 및 환류 — 정책 결과를 평가하고 그 정보를 다음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단계이다.

(가)의 학부모 단체와 학원 단체는 각자의 요구를 교육청에 제시하므로 이익 표출인 ㄱ에 해당한다. (나)의 정당은 여러 이익집단의 입장을 반영하여 선거 공약으로 정리하므로 이익 집약과 조정인 ㄴ에 해당한다. 이익이 먼저 사회에 표출되어야 정당이 그 요구들을 모아 조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각 단체가 요구를 제시하는 이익 표출(ㄱ), (나)는 정당이 요구를 공약으로 정리하는 이익 집약과 조정(ㄴ)이므로 옳다.

② X — 틀린 부분은 (나)를 정책 결정(ㄷ)으로 본 것이다. 정당이 선거에 제시할 공약을 마련하는 활동은 여러 요구를 모으고 조정하는 단계이며, 공적 기관이 정책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가) ㄱ, (나) ㄴ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가)를 이익 집약과 조정(ㄴ), (나)를 이익 표출(ㄱ)로 서로 바꾼 것이다. (가)는 단체들이 각자의 요구를 드러내고, (나)는 정당이 그 요구를 공약으로 종합한다. 올바르게는 (가) ㄱ, (나) ㄴ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가)를 이익 집약과 조정(ㄴ), (나)를 정책 집행(ㄹ)으로 본 것이다. (가)는 각 단체의 요구 제시이므로 이익 표출이고, (나)는 결정된 정책의 시행이 아니라 공약 마련이므로 이익 집약과 조정이다. 올바르게는 (가) ㄱ, (나) ㄴ이다.

⑤ X — 틀린 부분은 (가)를 정책 결정(ㄷ), (나)를 정책 집행(ㄹ)으로 본 것이다. (가)에서는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요구만 제시되었으며, (나)에서도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올바르게는 (가) ㄱ, (나) ㄴ이다.

**오답 포인트**

정당이 공약을 마련한다는 표현을 정책 결정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공약 마련은 여러 사회적 요구를 모아 정책 대안으로 조정하는 활동이고, 정책 결정은 국가의 공적 의사 결정 기관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선택·확정하는 활동이다. 또한 집회나 요구 제시는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밖으로 드러내는 이익 표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집단이 요구를 드러내면 이익 표출, 정당이 여러 요구를 공약이나 정책 대안으로 묶으면 이익 집약과 조정, 공적 기관이 안을 확정하면 정책 결정, 행정 기관이 시행하면 정책 집행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집단은 요구를 표출하고, 정당은 요구를 집약하며, 국가 기관은 정책을 결정·집행한다.

NoteBase

**7.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환율이란 쉽게 말하면 외국 돈으로 표시된 우리 돈의 가격이다.
② 환율 변동의 요인으로는 외국과 자국 간의 금리 차이, 해외 경기 동향, 외국 상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 등이 있다.
③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낮아져 수출이 감소한다.
④ 환율이 하락하면 외환의 공급량은 증가한다.
⑤ 환율을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을 변동환율제도라고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환율의 뜻, 환율 변동 요인과 수출입 효과, 환율 제도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환율은 외국 돈 1단위의 가치를 우리 돈으로 나타낸 가격이다.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을 뜻하므로 국내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낮아져 수출에 유리하고, 환율 하락은 그 반대 효과를 낸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며,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정부나 통화 당국이 특정 수준의 환율을 정하고 유지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환율은 '외국 돈으로 표시된 우리 돈의 가격'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표시된 외국 돈의 가격'이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300원이라면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이다.

② O
두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 해외 경기 동향, 외국 상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 변화는 국제 자금 이동이나 외환의 수요·공급을 바꾸므로 환율 변동 요인이 된다.

③ X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수요자의 구매력이 낮아져 수출이 감소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을 뜻하므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낮아져 일반적으로 수출이 증가한다.

④ X
'환율이 하락하면 외환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외환 공급곡선 위에서 환율이 하락하면 외환의 공급량은 감소한다.

⑤ X
'정부가 환율을 임의로 정하는 것을 변동환율제도라고 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정해지는 것이 변동환율제도이며, 정부나 통화 당국이 특정 환율을 정하고 유지하는 것은 고정환율제도이다.

### 오답 포인트

①은 환율 정의에서 표시 통화와 대상 통화를 뒤바꾸고, ③과 ④는 환율 상승·하락의 효과를 반대로 제시한다. ⑤는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의 결정 주체를 바꿔 놓은 선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환율을 '외국 돈 1단위당 우리 돈의 양'으로 바꾸어 읽는다. 그다음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수출 증가 방향,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수출 감소 방향으로 연결하고, 시장의 수요·공급이 결정하면 변동환율제도, 정부나 통화 당국이 특정 수준을 정해 유지하면 고정환율제도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환율 상승은 원화 가치 하락, 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 상승이다. 시장이 정하면 변동, 당국이 정해 유지하면 고정이다.

NoteBase

8.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보내는 송금은 국제수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① 상품 수지
② 자본 수지
③ 서비스 수지
④ 본원 소득 수지
⑤ 이전 소득 수지

**정답 5번**

### 출제 포인트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부모가 보내는 생활비처럼 재화·서비스나 노동·자본 제공의 대가 없이 이전되는 돈을 국제수지의 어느 항목에 기록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이전 소득 수지는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한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이전되는 소득을 기록한다.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학비 송금, 해외 교포의 국내 가족 송금, 국제기구 분담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품 수지는 재화의 수출입, 서비스 수지는 운송·여행 등 서비스 거래, 본원 소득 수지는 노동이나 자본을 제공한 대가인 임금·이자·배당 등의 수입과 지급을 기록한다. 자본 수지는 자본 이전이나 비생산·비금융자산의 거래를 기록하므로 단순한 생활비 송금과 구별된다.

### 선지별 해설

① X — 상품 수지는 재화의 수출과 수입을 기록한다. 부모가 유학생 자녀에게 보내는 돈은 재화를 사고판 대금이 아니므로 '상품 수지'가 아니라 '이전 소득 수지'이다.
② X — 자본 수지는 자본 이전이나 비생산·비금융자산의 거래를 기록한다. 유학생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학비 송금은 '자본 수지'가 아니라 '이전 소득 수지'이다.
③ X — 서비스 수지는 운송, 여행, 통신 등 서비스의 제공과 그 대가를 기록한다. 부모의 송금은 자녀가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가 아니므로 '서비스 수지'가 아니라 '이전 소득 수지'이다.
④ X — 본원 소득 수지는 국경을 넘어 노동이나 자본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 이자, 배당 등의 대가를 기록한다. 부모의 송금은 생산요소 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본원 소득 수지'가 아니라 '이전 소득 수지'이다.
⑤ O —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보내는 돈은 반대급부 없이 이전되는 생활비·학비 성격의 송금이므로 이전 소득 수지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는 이유만으로 ② 자본 수지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국제수지 항목은 단순히 돈의 이동 여부가 아니라 그 돈이 재화·서비스·생산요소의 대가인지, 아무 대가 없는 이전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이 문항의 핵심 표현은 '부모가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송금'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송금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재화의 대금이면 상품 수지, 서비스의 대가이면 서비스 수지, 노동·자본 제공의 대가이면 본원 소득 수지, 아무런 대가 없는 가족 생활비·학비 송금이면 이전 소득 수지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대가 없는 해외 가족 송금은 이전 소득 수지이다.

NoteBase

9. 다음 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중 하나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목적 | ㉠ |
|---|---|
| 특징 | · ㉡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br>· ㉢ 능력별 부담<br>· ㉣ |
| 사례 | ㉤ |

① ㉠에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능력 향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다.
② ㉡을 통해 공공부조임을 알 수 있다.
③ ㉢은 원칙적으로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④ ㉣에 '근로 의욕 상실 우려'가 들어갈 수 있다.
⑤ ㉤에 '기초연금제도'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표의 '금전적 지원 원칙'과 '능력별 부담'을 통해 사회 보험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공공 부조 및 사회 서비스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회 보험: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노령·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비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가입자가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위험이 발생하면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공공 부조: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이다.
사회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돌봄·재활 등 비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능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의 생활 능력 향상 지원'은 사회 서비스의 목적에 가깝다. 표의 사회 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소득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고쳐야 한다.
② X —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징만으로 표의 제도를 공공 부조라고 판단할 수 없다. 표는 보험료를 부담 능력에 따라 내는 사회 보험을 나타내며, 공공 부조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구별해야 한다.
③ O — 사회 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받게 될 급여의 크기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고, 소득 등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된다. 따라서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는 설명이 옳다.
④ X — '근로 의욕 상실 우려'는 소득이나 재산을 심사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 부조에서 주로 지적되는 문제이다. 사회 보험의 빈칸에는 강제 가입, 상호 부조, 사전 예방적 성격 등 사회 보험의 특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⑤ X — 기초 연금 제도는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 보험의 사례가 아니다. 사회 보험의 사례로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들어간다.

### 오답 포인트

'금전적 지원'이라는 말만 보고 곧바로 공공 부조를 고르면 안 된다. 이 문항에서는 '능력별 부담'과 보험 방식이라는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하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구별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용 부담 방식과 대표 사례를 먼저 확인한다. 보험료를 내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면 사회 보험, 조세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면 공공 부조, 상담·돌봄·재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회 서비스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사회 보험은 보험료·사회적 위험, 공공 부조는 조세·최저 생활, 사회 서비스는 상담·돌봄이다.

NoteBase

**1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 패널 토론 주제 : 한류 열풍과 대중문화 >**
>
> 패널 1 : 현재 우리나라 ㉠ 문화계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계 곳곳에서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한국 ㉡ 대중문화의 인기는 단기간의 유행에 그칠 위험도 있습니다.
>
> 패널 2 : 한류는 일시적 문화 양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음악이나 ㉢ 텔레비전 방송뿐만 아니라, 한국의 ㉣ 예절이나 가치관도 함께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한류는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 패널 3 : 한류의 지속을 위해서는 지나친 상업적 이익 추구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익이 되는 분야에만 치중한다면 예술적 순수성이 사라진 ㉤ 질이 낮은 문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은 좁은 의미의 문화를 의미한다.
② ㉡은 다양한 매체의 등장과 발달로 확산되었다.
③ ㉢은 문화의 향유 계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④ ㉣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⑤ ㉤은 반문화에 해당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문화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대중문화의 성립 배경과 문제점,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하위문화와 반문화의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좁은 의미의 문화: 예술·학문처럼 세련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정신적 활동을 뜻한다.
넓은 의미의 문화: 한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고 학습한 생활 양식 전체를 뜻한다.
대중문화: 대중 매체를 통해 다수의 사람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문화이며, 대중 매체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였다.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물질문화는 도구·기계·건축물처럼 형태가 있는 문화이고, 비물질문화는 가치관·규범·관습·언어처럼 형태가 없는 문화이다.
하위문화와 반문화: 하위문화는 특정 집단이 공유하는 문화이고, 반문화는 지배적인 문화를 거부하거나 대립하는 하위문화이다. 문화의 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반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은 '문화계 종사자'의 문화로,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가리키므로 좁은 의미의 문화에 해당한다.
② O — ㉡ 대중문화는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등 다양한 대중 매체의 등장과 발달을 바탕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③ O — ㉢ 텔레비전 방송은 문화 콘텐츠를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하여 문화의 향유 계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④ O — ㉣ 예절이나 가치관은 형태가 없는 규범과 관념이므로 비물질문화에 해당한다.
⑤ X — 틀린 표현은 '㉤은 반문화에 해당한다'이다. ㉤은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질 낮은 대중문화를 뜻할 뿐,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반문화라는 의미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은 대중문화의 지나친 상업화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해당한다'이다.

### 오답 포인트

⑤는 '질이 낮은 문화'를 '반문화'와 연결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반문화는 문화의 수준이 낮은 문화가 아니라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립하는 문화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화의 분류는 평가가 아니라 개념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술·학문은 좁은 의미의 문화, 생활 양식 전체는 넓은 의미의 문화, 가치관·규범은 비물질문화,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과 대립은 반문화로 구별한다.

### 암기 포인트

반문화는 '질이 낮은 문화'가 아니라 '지배문화에 저항하는 문화'이다.

NoteBase

11.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A국의 헌법 조항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내용 | 헌법 개정 전 | 헌법 개정 후 |
|---|---|---|
| 정부 형태와 관련한 주요 헌법 조항 | -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br>- 내각은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br>-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개정 전에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었다.
② 개정 후에는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개정 전에는 개정 후와 달리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
④ 개정 후에는 개정 전에 비해 의회와 내각의 분리 정도가 높다.
⑤ 개정 전, 개정 후 모두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헌법 개정 전의 의원 내각제와 개정 후의 대통령제를 의회·내각의 관계, 상호 견제 수단, 권력 분립 정도를 기준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파를 기반으로 내각이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이다. 의회와 내각의 결합 정도가 높으며,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으로 서로를 견제한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의회와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행정부를 이끄는 정부 형태이다. 의회와 행정부의 분리 정도가 높으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등이 견제 수단이 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개정 전은 의원 내각제이므로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틀린 표현은 '각료를 겸직할 수 없었다'이며, 올바르게는 '각료를 겸직할 수 있었다'이다.
② X — 개정 후는 대통령제로, 행정부가 의회의 신임을 존립 근거로 삼거나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이며, 올바르게는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독립하여 성립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끈다'이다.
③ X — 개정 전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 후 대통령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개정 전에는 …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이며, 올바르게는 '개정 전에는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이다.
④ O — 개정 후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므로, 의회 다수파를 기반으로 내각이 구성되는 개정 전 의원 내각제보다 의회와 내각의 분리 정도가 높다.
⑤ X — 개정 전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이끌며, 개정 후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다. 틀린 표현은 '개정 전·개정 후 모두 … 대통령이다'이며, 올바르게는 '개정 전에는 총리, 개정 후에는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끈다'이다.

### 오답 포인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의회와 행정부가 결합된 것은 아니다. 이는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한 대통령제의 견제 수단이다. 또한 의원 내각제의 핵심은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 해산권이 서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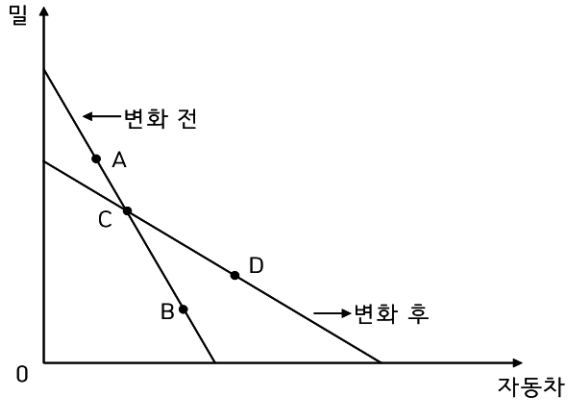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되고 내각에 의회 해산권이 있으면 의원 내각제로 판단한다. 대통령이 의회와 별도로 선출되고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면 대통령제로 판단한다. 그다음 의원 내각제는 권력 융합,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이라는 기준을 선지에 적용한다.

### 암기 포인트

의원 내각제는 '불신임권과 해산권, 권력 융합', 대통령제는 '별도 선거와 거부권, 권력 분립'이다.

NoteBase

12. 다음은 생산가능곡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변화 후 증가하였다.
② 두 생산가능곡선 모두 자원의 희소성을 나타낸다.
③ A점보다 B점에서 밀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다.
④ C점보다 D점이 더 효율적인 생산조합이다.
⑤ 기회비용은 기회의 균등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로 기회비용을 비교하고, 곡선 위의 점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생산 조합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변화 전 곡선은 더 가파르고 변화 후 곡선은 더 완만하며, 두 곡선은 C점에서 교차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1단위를 늘릴 때 포기하는 밀의 양으로,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에 해당한다. 변화 후 곡선이 변화 전보다 완만하므로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하였다.
② O — 생산가능곡선은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조합을 나타낸다. 자동차를 더 생산하려면 밀 생산을 포기해야 하는 모습은 자원이 희소하여 선택과 기회비용이 발생함을 보여 준다.
③ X — A점과 B점은 모두 직선인 변화 전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다. 직선의 기울기는 어느 점에서나 같으므로 밀 생산의 기회비용도 A점과 B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B점에서 더 작다'가 아니라 'A점과 B점에서 같다'가 옳다.
④ X — C점과 D점은 모두 변화 후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이므로 주어진 자원을 완전히 활용한 효율적인 생산 조합이다. 따라서 D점이 C점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두 점 모두 효율적이다.
⑤ X —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포기한 대안 가운데 가치가 가장 큰 것, 즉 차선의 대안 가치이다. '기회의 균등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곡선이 오른쪽으로 늘어난 부분만 보고 생산 능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변화 후에는 자동차의 최대 생산량은 늘고 밀의 최대 생산량은 줄었으며, 기울기도 완만해졌다. 또한 같은 생산가능곡선 위의 C점과 D점은 생산물 구성만 다를 뿐 모두 효율적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곡선 위·안·밖을 구분한다. 곡선 위는 효율적, 곡선 안은 비효율적, 곡선 밖은 현재 달성 불가능한 조합이다. 다음으로 가로축 재화의 기회비용은 곡선 기울기의 절댓값, 세로축 재화의 기회비용은 그 역수로 비교한다. 직선형 생산가능곡선에서는 기울기와 기회비용이 일정하다.

### 암기 포인트

생산가능곡선은 희소성과 선택을 나타내며, 곡선 위는 효율적이고 직선의 기울기는 일정한 기회비용을 뜻한다.

NoteBase

13. 다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 (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 (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가)에 나타난 기본권은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띤다.
② (나)에 나타난 기본권의 다른 예로는 청원권이 있다.
③ (다)에 나타난 기본권은 복지 국가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가)에 나타난 기본권은 (나), (다)에 나타난 기본권에 비해 역사가 오래되었다.
⑤ (나)에 나타난 기본권은 (가), (다)에 나타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을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으로 분류하고 각 기본권의 성격과 역사적 등장 순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을 보장받는 권리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과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실현되지 않을 때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핵심 구분**

(가) 통신의 비밀은 자유권, (나) 공무담임권은 참정권, (다) 재판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한다. 현행 헌법도 각각 제18조, 제25조, 제27조에서 이를 보장한다. 자유권은 근대 시민혁명기에 먼저 확립되었고, 참정권은 그 뒤 정치 참여의 확대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며, 복지 국가의 등장과 밀접한 기본권은 사회권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가)의 통신의 비밀은 자유권이므로 국가의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의 성격을 띤다.
틀린 표현: 적극적 권리
올바른 표현: 소극적·방어적 권리

② X
(나)의 공무담임권은 참정권이지만 청원권은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이다.
틀린 표현: 공무담임권의 다른 예로는 청원권이 있다
올바른 표현: 공무담임권과 같은 참정권의 다른 예로는 선거권이 있다

③ X
(다)의 재판청구권은 청구권이다. 복지 국가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 사회권이다.
틀린 표현: 재판청구권은 복지 국가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바른 표현: 사회권은 복지 국가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④ O
(가)의 자유권은 근대 시민혁명기에 가장 먼저 확립된 기본권으로, 이후 확대된 (나)의 참정권과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의 청구권보다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다.

⑤ X
수단적 성격을 지니는 것은 (나)의 참정권이 아니라 (다)의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 등 다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틀린 표현: 공무담임권은 통신의 비밀과 재판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올바른 표현: 재판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 오답 포인트

공무담임권을 국가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권리로 보아 청구권으로 오인하거나, 청구권의 수단적 성격을 참정권의 성격으로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또한 복지 국가와 직접 연결되는 기본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사회권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가의 간섭 배제는 자유권, 정치 과정 참여는 참정권, 국가에 구제나 급부를 요구하는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으로 분류한다. 역사 순서를 묻는 경우 자유권이 먼저 확립되고 참정권과 사회권이 뒤이어 확대되었다는 흐름을 적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통신의 비밀은 자유권, 공무담임권은 참정권, 재판청구권은 청구권이다. 자유권은 가장 오래되고,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수단이다.

NoteBase

**14. 다음은 국회에 관한 헌법 조항을 발췌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 (나) 국회는 … (중략) …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 (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가)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기능에 해당한다.
② (나)는 국정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국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③ (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이원집정부제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④ (가), (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⑤ (가)~(다)는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답 5번**

### 쟁점

이 문제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국정감사·국정조사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의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견제의 방향,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범위·실시 시기,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포함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구별하는 것이다.

### 용어 풀이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제도이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 사안을 필요에 따라 조사하는 제도이다. 해임건의권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 핵심 구분

헌법 제54조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매년 실시하지만,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헌법 제63조에 따른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대통령제에 가미된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세 권한은 모두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의 핵심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재정 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기능
올바른 표현: 행정부의 예산 편성·제출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다.

② X
(나)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뿐 아니라 특정한 국정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도 함께 규정한다. 따라서 (나) 전체를 국정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능으로만 설명하면 국정조사의 대상을 빠뜨린다.
틀린 표현: 국정 전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국회의 기능
올바른 표현: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③ X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가미된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이를 이원집정부제적 요소라고 한 부분이 틀리다.
틀린 표현: 이원집정부제적인 요소
올바른 표현: 의원내각제적인 요소

④ X
(가)의 예산 절차와 국정감사는 매년 이루어지지만, 국정조사는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따라서 (나)에 포함된 모든 기능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틀린 표현: (가), (나)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올바른 표현: (가)의 예산 절차와 국정감사는 매년 이루어지지만,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실시한다.

⑤ O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정감사·국정조사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은 행정부를 통제하거나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도록 하므로 모두 권력 분립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견제의 방향을 반대로 읽기 쉽고, ②와 ④에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같은 범위·시기의 제도로 오해하기 쉽다. ③에서는 국무총리와 해임건의권이 보인다는 이유로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동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제출하고 국회가 심의·확정한다'는 주체별 역할을 먼저 나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전반·매년'과 '특정 사안·필요시'로 구별한다. 국무총리제, 국무회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성,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대통령제에 가미된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예산은 정부 편성·국회 확정, 국정감사는 전반·매년, 국정조사는 특정·필요시, 해임건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이다.

NoteBase

15. 다음 표는 A국의 의회 선거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선거 종류 | 지역구 선출 방식 | 지역구 선거구제 | 비례 대표 선출 방식 |
|---|---|---|---|
| 중앙의회 선거 | 단순 다수 대표제 | 소선거구제 | 정당별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
| 지방의회 선거 | 소수대표제 | 중선거구제 | 정당별 지역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

① 중앙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득표 순으로 일정한 인원이 당선된다.
②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에서는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 1인을 선출한다.
③ 중앙의회 선거는 지방의회 선거에 비해 소수당의 의회 진출에 불리하다.
④ 지방의회 선거는 중앙의회 선거에 비해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
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3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당선 방식, 비례 대표 의석의 배분 단위가 사표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되는 방식이다.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므로 의석수만큼 득표 순위가 높은 후보들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비례 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전국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면 지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할 때보다 여러 지역에 지지가 분산된 소수 정당의 표가 의석으로 연결되기 쉽다.
사표: 낙선 후보에게 투표되거나 당선에 필요하고 남은 표처럼 의석 획득에 반영되지 못한 표이다. 일반적으로 선거구당 당선자가 1명인 소선거구제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쉽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중앙의회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이므로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된다. 틀린 표현은 '득표 순으로 일정한 의원이 당선된다'이며, 올바르게는 '최다 득표자 1명이 당선된다'이다.
② X —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는 중선거구제이므로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의원을 선출한다. 틀린 표현은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 1인을 선출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선거구의 의석수만큼 득표 순위가 높은 후보들을 선출한다'이다.
③ O — 중앙의회 지역구 선거의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시키므로, 여러 명을 선출하는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의 중선거구제보다 소수 정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의회 선거는 지방의회 선거에 비해 소수당의 의회 진출에 불리하다.
④ X — 지방의회 지역구 선거는 여러 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이므로 한 명만 뽑는 중앙의회 소선거구제보다 일반적으로 더 다양한 표가 당선으로 연결되어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틀린 표현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이며, 올바르게는 '중앙의회 소선거구 선거에서 지방의회 중선거구 선거보다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쉽다'이다.
⑤ X — 비례 대표 선출 방식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의 비례성을 높여 표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틀린 표현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올바르게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표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당선자 수를 서로 바꾸어 놓았다. ④는 소선거구제가 사표를 더 많이 만들기 쉽다는 관계를 반대로 제시했고, ⑤는 의석 배분 방식인 비례 대표제를 투표 절차의 원칙인 비밀선거와 혼동하게 만든 선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선거구당 당선자 수를 본다. 1명이면 소선거구제, 여러 명이면 중·대선거구제이다. 다음으로 비례 대표 의석의 배분 범위를 본다. 전국 단위로 표를 합산할수록 지역별로 흩어진 소수 정당의 표가 의석으로 연결되기 쉽다.

### 암기 포인트

소선거구는 1명·사표 증가, 중선거구는 복수 당선·사표 감소, 비례 대표는 득표율과 의석의 비례성 강화이다.

NoteBase

16.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공법, 사법, 사회법 중 하나이다.)

> 법은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라 크게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에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나타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문제를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가)에 의해 규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제적 강자인 고용주나 회사와의 관계에서 노동자나 소비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가 등장하였다. 원래 (가)가 규율하던 생활 영역을 (나)를 통해 국가가 규율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 "(가)의 (다)화"라고 한다.

① (가)에 속하는 법으로는 민법, 민사소송법이 있다.
② (나)는 산업화 이후 그 중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③ (나)는 국가기관과 기관 사이의 관계를 주로 규율한다.
④ (다)의 예로는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이 있다.
⑤ (다)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여한다.

**정답 5번**

### 출제 포인트

법이 규율하는 생활 영역에 따라 사법·사회법·공법을 구분하고, 각 법 영역의 특징과 대표 법률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사법: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민법·상법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법: 사적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법이다.
노동법·사회 보장법·경제법 등이 포함된다.
공법: 국가의 조직과 작용, 국가와 개인의 관계 및 형사 작용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헌법·행정법·형법·민사소송법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제시문의 (가)는 사법, (나)는 사회법, (다)는 공법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사법이지만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재판 작용을 규율하는 공법이다. 올바르게는 사법의 예로 민법·상법 등을 들 수 있다.
② X - 산업화 이후 노동자·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커지면서 (나)인 사회법의 중요성은 강화되었다.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표현은 '점차 강화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국가기관의 조직과 국가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주로 규율하는 것은 (다)인 공법이다. (나)인 사회법은 사적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④ X -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은 약자 보호와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나)인 사회법의 예이다. '(다)의 예'가 아니라 '(나)의 예'로 고쳐야 한다.
⑤ O - (다)는 공법이다. 공법에는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형법 등도 포함되므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관여한다.

### 오답 포인트

'민사소송법'에 '민사'라는 말이 들어 있다고 사법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소송법은 국가의 재판 작용을 규율하므로 공법이다. 또한 사회법은 사법과 공법의 성격이 결합된 영역이지만,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 자체를 규율하는 공법과는 구별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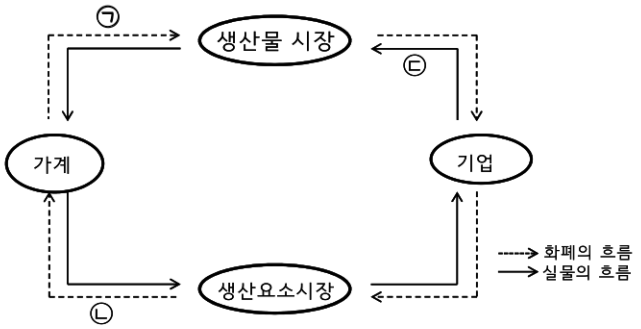
규율 관계를 먼저 본다.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관계이면 사법, 약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사적 관계에 개입하면 사회법, 국가의 조직·작용이나 국가와 개인의 공적 관계이면 공법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개인끼리는 사법, 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 개입은 사회법, 국가의 조직·작용과 형벌은 공법이다.

NoteBase

17. 다음은 가계와 기업 간의 경제 순환 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지출이다.
② ㉠은 요소소득, ㉡은 소비지출이다.
③ ㉡은 공공재 사용료가 포함된다.
④ ㉢은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이다.
⑤ 세금은 생산요소시장에 포함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가계와 기업 사이에서 화폐와 실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을 바탕으로 경제 순환 모형의 각 화살표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점선은 화폐의 흐름이고 실선은 실물의 흐름이므로, ㉠은 가계가 생산물 시장에 지급하는 소비지출, ㉡은 생산요소 시장에서 가계로 지급되는 요소소득, ㉢은 기업이 생산물 시장에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은 점선 화살표가 가계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향하므로, 가계가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지급하는 소비지출이다.
② X — ㉠을 요소소득이라고 한 부분과 ㉡을 소비지출이라고 한 부분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은 소비지출이고, ㉡은 생산요소를 제공한 가계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요소소득이다.
③ X — ㉡은 생산요소 시장에서 가계로 지급되는 요소소득이며, 공공재 사용료가 포함되는 흐름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임금·지대·이자·이윤 등의 요소소득이 ㉡에 해당한다.
④ X — ㉢의 실선 화살표는 기업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향하므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다. 올바르게는 가계가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수요한다.
⑤ X — 세금은 가계나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화폐이며 생산요소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생산요소 시장에서 노동·토지·자본 등의 생산요소와 그 대가인 요소소득이 거래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화살표가 연결된 시장만 보고 의미를 정하면 ㉠과 ㉡을 뒤바꾸기 쉽다. 특히 가계가 생산물 시장에 보내는 화폐는 소비지출이고, 생산요소 시장에서 가계로 들어오는 화폐는 요소소득이다. 또한 ㉢은 기업에서 시장으로 향하는 실물 흐름이므로 기업의 공급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점선과 실선을 구분한 뒤 화살표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확인한다. 가계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가는 화폐는 소비지출, 생산요소 시장에서 가계로 가는 화폐는 요소소득, 기업에서 생산물 시장으로 가는 실물은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가계는 생산물을 사고 소비지출을 하며,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요소소득을 얻는다. 기업은 생산요소를 사고 생산물을 공급한다.

NoteBase

**18. 다음 사례에 나타난 사회 이동의 유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씨는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재기를 꿈꾸던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조그만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고, 남들과는 다른 창의적인 영업 방식과 홍보 방법을 도입하여 갑국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 대표가 되었다.

<보기>

ㄱ. 수직 이동　　ㄴ. 구조적 이동
ㄷ. 개인적 이동　　ㄹ. 세대 간 이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한 사람의 지위 변화가 수직 이동·구조적 이동·개인적 이동·세대 간 이동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핵심 사실 1: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가 외환위기로 회사가 부도나 실직자가 되었다.
핵심 사실 2: 이후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열고 창의적인 영업·홍보 방법을 도입하여 대기업 대표가 되었다.
판단에 중요한 조건: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가 달라졌고, 회사 부도라는 사회 구조적 요인과 A씨의 개인적 노력이 함께 작용했으며, 모든 변화가 A씨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일어났다.

**핵심 개념**

수직 이동은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이동이다.
구조적 이동은 경제 위기나 산업 구조 변화처럼 사회 구조의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이동이다.
개인적 이동은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이동이다.
세대 간 이동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이동이다.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위 변화는 세대 내 이동이다.

NoteBase

**적용 기준**

회사원에서 실직자로의 하강과 실직자에서 대기업 대표로의 상승은 지위의 높낮이가 변한 수직 이동이다. 외환위기로 인한 회사 부도와 실직은 사회 구조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 이동이고, 쇼핑몰 창업과 창의적 영업·홍보를 통한 성공은 개인적 노력에 따른 개인적 이동이다. 부모와 자녀의 지위를 비교하지 않으므로 세대 간 이동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 ㄴ'만 고른 것이 틀렸다. 수직 이동과 구조적 이동뿐 아니라 A씨의 창업과 경영 노력에 따른 개인적 이동도 나타나므로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② X — 'ㄱ, ㄷ'만 고른 것이 틀렸다. 외환위기로 회사가 부도나 실직한 변화는 구조적 이동에도 해당하므로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③ X — 'ㄴ, ㄷ'만 고른 것이 틀렸다. 회사원·실직자·대기업 대표 사이의 변화는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수직 이동이므로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④ O — 지위가 하강·상승했으므로 수직 이동, 외환위기와 회사 부도가 원인이 되었으므로 구조적 이동, 개인의 창업과 창의적 노력으로 대표가 되었으므로 개인적 이동이 모두 나타난다.
⑤ X — 'ㄹ. 세대 간 이동'을 포함하고 'ㄱ. 수직 이동'을 제외한 것이 틀렸다. 부모와 자녀 세대를 비교하지 않고 A씨의 생애 안에서 지위가 변했으므로 세대 내 수직 이동이며, 올바르게는 'ㄱ, ㄴ, ㄷ'이다.

**오답 포인트**

하나의 사회 이동 사례에는 여러 유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라는 구조적 원인만 보고 A씨의 창업 노력을 놓치거나,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대 간 이동으로 판단하면 틀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위의 높낮이가 변했는지로 수직·수평 이동을 구분하고, 이동의 원인이 사회 구조인지 개인의 노력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를 비교하면 세대 간 이동, 한 사람의 생애를 추적하면 세대 내 이동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위 높낮이 변화는 수직, 사회 변화가 원인이면 구조적, 개인 노력이 원인이면 개인적, 부모·자녀 비교가 있어야 세대 간 이동이다.

NoteBase

**19. 밑줄 친 ㉠과 같은 기관에 대한 설명과 추론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A 국가에는 ㉠ 시민 교육 학교라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있다. 이 기관은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6개월간 무료 또는 12만원이라는 싼값에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65세 이후의 퇴직 노인들이 대다수인데, 시민 교육 학교 덕분에 이들은 퇴직 후에도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다.

<보 기>

ㄱ. 재사회화를 주로 담당한다.
ㄴ. 사회 변동 속도가 빠를수록 그 역할이 커질 것이다.
ㄷ. 사회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ㄹ.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1번**

### 출제 포인트

평생교육기관의 사회화 기능을 재사회화 여부, 사회 변동과의 관계, 교육 기회 불평등, 사회화 기관의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 핵심 개념

재사회화는 사회 변화나 생애 단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지식·기능·가치 및 행동 양식을 새로 학습하는 과정이다.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가족처럼 기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하고, 2차적 사회화 기관은 학교·직장·평생교육기관처럼 이후의 전문적 지식과 역할을 학습하게 한다.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의도적·체계적으로 교육한다. 따라서 정규 교육기관인지 여부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구분 기준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ㄱ과 ㄴ이 모두 옳다. 시민 교육 학교는 은퇴 이후의 새로운 역할과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게 하므로 재사회화를 담당하며, 사회 변동이 빨라질수록 새로운 지식과 역할을 계속 배워야 하므로 그 역할이 커진다.
② X — ㄷ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가 틀렸다. 저렴하거나 무료이고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므로 교육 기회를 넓혀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③ X — ㄷ이 틀렸다. 접근성이 높은 평생교육기관은 사회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보다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④ X — ㄹ의 '1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틀렸다. 시민 교육 학교는 성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체계적 교육을 실시하므로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⑤ X — ㄷ과 ㄹ이 모두 틀렸다. 이 기관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2차적·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 오답 포인트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로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공식성은 정규 학교 여부가 아니라 사회화를 주된 목적으로 의도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낮은 비용과 개방된 참여 조건은 교육 기회 불평등의 심화가 아니라 완화의 근거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상이 성인이고 변화한 환경이나 역할에 필요한 내용을 다시 배우면 재사회화로 판단한다. 기관 유형은 정규·비정규라는 명칭이 아니라 기초 사회화인지 후속 사회화인지, 교육이 의도적·체계적인지를 각각 확인한다.

### 암기 포인트

평생교육기관은 재사회화를 담당하는 2차적·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며, 접근성이 높으면 교육 기회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NoteBase

20. 다음 표는 복수 정당제의 유형 (가), (나)의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양당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

| 구분 | (가) | (나) |
|---|---|---|
|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 | 예 | 아니오 |
| A | 예 | 예 |
| B | 아니오 | 예 |
| C | 아니오 | 아니오 |

① (가)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다.
② (나)는 (가)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③ A에는 '국민 주권의 원리 실현에 기여'가 들어갈 수 있다.
④ B에는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 가능성이 높음'이 들어갈 수 있다.
⑤ C에는 '민주적인 정권 교체 가능'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표의 특징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각각 다당제와 양당제로 구분하고, 두 정당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다당제: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경쟁하는 정당제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쉽지만 군소 정당 난립이나 연립 정부 구성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양당제: 정권 획득 가능성이 있는 두 개의 거대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제로, 정권 교체가 비교적 분명하고 정국이 안정되기 쉽지만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표의 (가)는 다당제이고, (나)는 양당제이다. A는 두 제도의 공통점, B는 양당제에만 해당하는 특징, C는 어느 제도에도 해당하지 않는 특징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다당제인데 미국과 영국은 교과서에서 양당제의 대표적 국가로 분류한다. 틀린 표현은 '(가)의 대표적인 국가'이며, 올바르게는 '(나)의 대표적인 국가'이다.
② X — (나)는 양당제이므로 다당제인 (가)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반영하기에 용이하다'이며, 올바르게는 '반영하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이다.
③ O — 양당제와 다당제 모두 복수의 정당이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므로 국민 주권의 원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두 제도의 공통점인 A에 들어갈 수 있다.
④ X — 군소 정당 난립과 그에 따른 정국 불안정은 일반적으로 다당제인 (가)의 특징이다. 틀린 부분은 이 특징이 'B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며, 올바르게는 '(가)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B가 아니라 (가) 예, (나) 아니요인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이다.
⑤ X — 민주적인 정권 교체 가능성은 양당제와 다당제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C가 아니라 공통점인 A에 들어갈 수 있다. 틀린 표현은 'C에'이며, 올바르게는 'A에'이다.

### 오답 포인트

표의 A, B, C를 정당제의 고유 명칭으로 착각하기 쉽다. A는 두 제도의 공통점이고, B는 양당제에만 해당하며, C는 두 제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아니요 배열을 먼저 읽어야 한다. 특히 ④의 '군소 정당 난립'은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의 전형적 약점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 정당이 세 개 이상이면 다당제, 두 개이면 양당제로 판별한다. 그다음 다양한 의견 반영과 군소 정당 난립은 다당제 쪽, 정국 안정과 분명한 정권 교체는 양당제 쪽, 국민 주권 실현과 민주적 정권 교체 가능성은 두 제도의 공통점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다당제는 '다양한 의견·군소 정당·불안정 가능성', 양당제는 '두 거대 정당·정국 안정', 공통점은 '국민의 선택과 민주적 정권 교체'이다.

NoteBase